

빛공해 농작물 피해·대기오염 정신적 고통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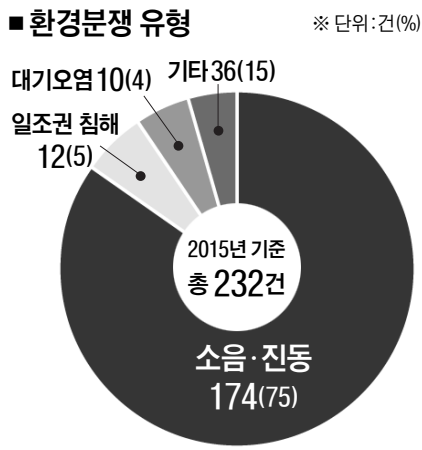
지난해 '5대 환경분쟁' 보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처리한 232건의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눈길을 끄는 '5대 사건'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환경피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경기도 군포의 농민은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와 콩의 수확량이 각각 85%, 19% 줄어든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농민 김모씨가 키우던 농작물은 야간조명으로부터 15~8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거리별 조도는 2.2~12.4룩스(lx)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정위는 야간 인공조명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과 수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가로등 등 인공조명으로 농작물 피해를 받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상어 피해를 최초로 인정한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 부천의 관상어 판매업자는 지하철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관상어가 폐사하거나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어 2827만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그간 어류 피해는 양어장 낚시터 등의 피해만 인정돼 왔다는 게 조정위 설명이다.



공사여파 관상어 피해 첫 배상

소음·진동 분쟁 가장 많아

“새 오염원·동물피해 대책 필요”

참숯공장에서 발생한 연기로 꿀벌이 죽어 3565만원을 배상받은 양봉업자(충남)도 있었다. 양봉 분야에선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만 인정됐었다.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김포의 주물공장 인근 주민은 공장에서 배출한 크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해 135만원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인한 최초의 피해인정 사건이

환경분쟁 사례	조정 의미
철도역 야간조명 때문에 들깨와 콩 수확량이 각각 85%, 19% 감소한 것에 대해 77만원 배상(경기도 군포시)	빛 공해 농작물 피해 첫 인정
지하철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관상어가 폐사한 피해에 대해 2827만원 배상(경기도 부천시)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상어 피해 인정
참숯공장에서 발생한 연기로 꿀벌이 죽어 양봉업자에 3565만원 배상(충남도)	양봉 분야에서 공사장 이외 소음·진동 피해 인정
주물공장장에서 배출한 크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주민에 135만원 배상(경기도 김포)	대기오염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인정
전철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애견학교 운영자의 피해 인정(울산시 울주군)	기준치 이내로 소음 발생해도 가족 피해 인정

라는 게 조정위 설명이다.

소음이 기준치(65dB) 이내여도 가족 피해가 인정된 사례도 나왔다. 울산 울주군의 애견훈련학교 운영자는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개가 죽거나 유산·사산한 피해를 인정받았다.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다는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비록 소음이 환경기준치 이하라도 실제로 피해를 받았다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분쟁은 대다수가 소음·진동 피해였다. 조정위가 올해 처리한 환경분쟁 중 소음·진동피해는 174건(75%)이었다. 일조권 침해가 12건(5%), 대기오염이 10건(4%)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처리 유형은

재정 72%(167건), 합의·조정 16%(38건)였다. 재정은 인과관계 여부와 피해액을 판단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은 위원회가 만든 안을 양측에 권고하는 방법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2015년에는 빛공해로 인한 피해배상이 최초로 이뤄졌으며 꿀벌, 관상어 등 다양한 동물에 대한 피해 인정사례도 많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자는 빛공해 등 새로운 오염원에 대해 충분한 피해방지대책을 세워야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피해 예방대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재선충병 별목 소나무 37%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

데크·퇴비·땀감으로 사용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물량의 37%에 해당하는 고사목 38만 9000t이 펠릿·데크·퇴비 등 친환경 자원으로 재활용됐다. 이는 한옥 5800채(1채 67㎡ 기준)를 지을 수 있는 분량이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로 말라죽어 방제된 나무는 171만 그루에 달한다. 지난해 2014년 만해도 주로 매개충을 죽이는 약제를 뿌리고 비닐로 밀봉하는 훈증 방식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피해목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19%에 그쳤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 감염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죽는 병이다.

지난해부터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수집해 반출한 뒤 파쇄·열처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 도입해 활용비용을 대폭 끌어올렸다.

지난해 피해목 활용비율은 대체 연료나 땀감 등 연료용 28만3000t, 데크와 조경용 등 목구조용 5만 9000t, 퇴비와 톱밥 등 농가용 4만 2000t 등 37%로 지난 2014년보다 1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2014년에는 218만 그루 중 41만 그루를 재활용했지만 지난해는 171만 그루 중 63만 그루를 활용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올해부터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경남·북, 제주도를 거점으로 우량목을 열처리해 고급재로 활용할 수 있는 대량방제시설이 본격 가동된다.

지난해 6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으로 잠재 감염목까지 모두 배어내는 방제방식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재선충병 피해목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친환경 목재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비율을 내년에는 전체의 50%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안타깝게 버려지는 나무들이 좀 더 가치있는 자원이 되도록 방제 후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는 ‘초미세먼지 해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설문…차량 2부제 도입 필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차량 2부제 도입을 꼽은 응답자 비율이 18.7%로 가장 높았다고 3일 밝혔다.

2위는 ‘제2의 가슴기 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한

스프레이 제품 흡입 독성시험 의무화’(17.6%), 3위는 ‘영덕 신규 원자력발전소 관련 주민투표 결과의 정부 수용과 원전 건설 철회’(17.4%) 등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나는 물음에는 ‘알고 있다’라는 답이 54.2%, ‘몰랐다’가 45.8%였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시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제안에는 71.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배출장치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폴크스바겐에 대한 조치로는 ‘강제 리콜로 배출장치 교체’(84.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조자 자율로 처리’라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배출가스 장치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국산 경유 차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9%가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므로 모두 리콜해 결함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난 12월 광주시 남구 사직동 전망타워에서 바라본 안개가 뿌옇게 낀 도심.

〈광주일보 자료사진〉

모든 폐기물 올해부터 바다에 못 버린다

육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됐다.

5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시작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2016년 1월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모두 육상처리로 전환했다.

한국은 지난 1993년과 2009년에 각각 가입한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따라 2006년 이후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산업폐기물은 2006년, 하수오니(찌꺼기)·가축분뇨는 2012년, 분뇨오니는 2013년,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폐수오니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 배출공정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체물질질을 가리킨다. 한국은 그동안 폐기물을 육상

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 지난 1991년에 129만t이던 해양배출량은 2005년엔 993만t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은 해양투기방지 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한 87개국 중 하나다. 일본이 2007년에 중단하고 중국도 이미 해양투기를 중단했지만 한국은 올해까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나라로는 가입국 중 유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육상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배출과 처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급 매”

싸고 좋은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구 7080자리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 ▶매매-5억6천만원
 - ▶융자 3억 6천만원 있음
 - ▶보5천만원에 월220만원 임대 보장
 - ▶주인 직매함
- H.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20층, 76평, 즉시 입주
- 사무실 전용, 분할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 시세-3억, 매매-2억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12-4번지
- 89평, 2차선 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북초 인근
- 장기투자 최적
- 시세-2천만원, 매매-550만원

남구, 송하동 임야

- 남구 송하동 산77번지
- 2026평, 도로에서 200m 지점
- 풍암동 대주 3차아파트 인근
- 장기투자 최적장소
- 시세-8천만원, 매매-3천 5백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시세-1억6천만원, 매매-1억1천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